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93
----------	------

발의연월일 : 2021. 3. 10.

발 의 자 : 심상정 · 강은미 · 강민정
류호정 · 배진교 · 양정숙
이은주 · 장혜영 · 이탄희
조정훈 · 이수진(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3기 신도시 중 여섯 번째 신도시로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 토지를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전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행태임. 공공택지 등과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 관

런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시 처벌),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7조제1항·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자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해당 기관의 이 법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재직 중에 지득한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을 위하여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2. 이 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

④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자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계산으로 이들 중 1인 이상 또는 그 밖의 타인의 명의로 토지(토지 위의 정착물 또는 지하의 구조물을 포함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 밖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의 자산 또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6호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 또는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은 자 및 제공받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이 항의 위반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것임을 사후에라도 알게 된 자에게도 제4항의 행위가 금지된다.

⑥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자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제4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 여부 검증을 위하여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국토교

통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 부동산 투기 여부 검증에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의 조사 협력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증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제9조제2항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배우자, 자녀, 직계존비속의 계산으로 제9조제4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거래한 금액의 3할 이상 5할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제9조제2항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또는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제1호와 제2항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 방자치단체(공공주택지구의 조 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자에 종 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해 당 기관의 이 법에 관한 업무 와 관련하여 재직 중에 지득한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 에서 “ <u>미공개 중요정보</u> ”라 한 다)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 을 위하여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신 설>

2. 이 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

④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
방자치단체(공공주택지구의 조
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자에 종
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미
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자
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의 계산으로 이
들 중 1인 이상 또는 그 밖의
타인의 명의로 토지(토지 위의
정착물 또는 지하의 구조물을
포함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
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
다), 그 밖에 「소득세법」 제
94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라목
까지 중 어느 하나의 자산 또

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6호
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이하 “부동산 등”)를 취득 또
는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취득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은
자 및 제공받은 미공개 중요정
보가 이 항의 위반행위에 의하
여 제공된 것임을 사후에라도
알게 된 자에게도 제4항의 행
위가 금지된다.

⑥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
방자치단체(공공주택지구의 조
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자에 종
사하는 자는 자신, 배우자, 직
계존비속이 제4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 여부 검증을 위하여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거래에 관
한 사항을 종사하고 있는 기관
의 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③ (생략)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 부동산 투기 여부 검증에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의 조사 협력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증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제9조제2항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배우자, 자녀, 직계존비속의 계산으로 제9조제4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취득하기

<신 설>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거래한 금액의 3할 이상 5할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제9조제2항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또는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p><u><신 설></u></p> <p><u>②</u> (생 략)</p>	<p><u>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u> <u>또는 5년 이상의 징역</u> <u>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u> <u>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u> <u>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u> <u>③ 제1항제1호와 제2항에 따라</u> <u>징역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u> <u>항제1호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u> <u>다.</u> <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p>
---	--